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5, No. 137, pp.1-38
<https://doi.org/10.29212/mh.2025..137.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기획 1

1945년 한반도의 일본군 무장해제와 군정

김윤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목 차**
1. 서론
 2. 작전한계선 결정에 따른 연합군정
 - 1) 연합군의 동아시아 점령
 - 2) 한반도의 연합군정과 군사회의
 3. 총독부에서 군사정부로 이관된 통치권
 - 1) 일본군의 현황과 군사정보 인계
 - 2) 미군의 점령작전 전개
 4. 무장해제라는 군사작전
 - 1) 일본군 무장해제와 군수물자 처리
 - 2) 연합군 포로 석방과 전쟁범죄자 처리
 - 3) 일본군 명부 작성과 귀환
 5. 결론

초 록 아시아태평양전쟁 이후 전후처리가 시작되었다. 일본군을 무장 해제하고 무력화시켜 더 이상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연합군은 이를 수행하기 위해 군사점령을 시작하고, 군정을 수립하는 군사작전을 시행했다.

한반도의 경우 작전한계선으로 38선을 긋고 미군과 소련군이 남북으로 점령했다. 분할 점령된 한반도는 독립국가로 인정받지 못한 채 미군이 설

립한 군사정부의 직접 통치를 받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왜 그렇게 되었는지 과정과 결과를 재정리해보았다. 전후처리와 군정의 개념, 아시아의 전후처리 특징, 1945년 8월 한국의 상황에 대한 군사적 검토, 미군의 군정 실시와 결과에 대해 검토하여 전후처리와 군정의 의미를 되돌아보았다.

주제어(Key Word) : 제2차 세계대전, 태평양전쟁, 전후처리, 냉전, 미군정, 전범처리, 소련(러시아)

원고투고일 : 2025. 10. 13. 심사수정일 : 2025. 11. 30. 게재확정일 : 2025. 12. 15.

1. 서론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는 독일과 일본의 무장해제를 목적으로 한 연합군의 점령에서 시작되었다. 1945년을 기점으로 전후의 국제 질서가 미국과 소련 중심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한국은 그 소용돌이에 있었다. 세계 질서를 바꾼 1945년은 가장 뜨거웠던 열전이 있었고, 각 국가의 물리적 기반인 군사력은 더욱 강화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과 아시아태평양전쟁을 경험한 국가들은 승전일과 패전일을 기념한다. 한국은 8월 15일을 광복절로, 일본은 8월 15일을 종전일로, 중국과 대만은 9월 3일을 승전일로, 소련(러시아)은 9월 2일을 승전일로, 베트남은 9월 2일을 독립일로, 인도네시아는 8월 17일을 독립일로 기념한다. 각기 다른 역사성 속에서 인식의 차이가 극명하다.¹⁾

일본은 미주리호 선상에서 9월 2일 항복선언서에 서명했으나 8월 15일 일왕의 ‘종전선언’을 기념한다. 중국은 9월 3일, 중화민국 국민혁명군 참모총장이 일본군 사령관으로부터 항복문서를 받은 날을 기념한다. 러시아는 일본과 전쟁을 잊고 있었지만, 2010년 일본과 남쿠릴열도 영유권 문제로 갈등이 고조되자 9월 2일을 기념일로 지정했다.²⁾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도 국가적 상황에 따라 날짜의 차이가 있으나 일본에서 벗어난 날을 독립일로 기념하고 있다.

한국은 8월 15일을 기념한다. 8월 15일의 의미에 대해 일찍부터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일본의 팽창과 제국 내 이동은 1945년 일

1) 하세가와 쓰요시 저·한승동 번역, 『종전의 설계자들』, 메디치미디어, 2019 참고.

2) 송준서, 「극동 러시아의 1945년 소련 - 일본 전쟁 기억과 기념일 정치」, 『슬라브학보』 34(3), 2019 참고.

본 제국의 붕괴로 대전환되었다. 물리적 통치가 일본군에서 미군으로 넘어가면서 군사적 체제는 지속되었다. 한국의 독립국가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미국과 소련은 38선을 경계로 점령하며 군정(軍政 Military Government)을 실시했다.³⁾

1945년 한반도는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시작되는 공간이 아니었다. 일본군과 미군이라는 두 군사 주체에 의해 새로운 군사작전이 펼쳐지는 공간이었다. 전술과 전투 작전을 준비했던 연합군은 전쟁이 아닌 평화 작전으로 전환하여 전후처리 과정의 수순을 밟으며 군사작전을 진행했다. 그러나 1946년부터는 상황이 달라졌다. 정치 외교적 힘이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한반도에 설립된 연합군정은 냉전이라는 대립의 길로 가고 있었다.⁴⁾

1945년의 의미에 대해 역사학, 정치외교학 등에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1945년의 역사를 계속해서 다시 검토하는 것은 현재의 한국을 이해하는 단초이기 때문이다. 전쟁 종결 이후 한국, 일본, 중국, 오키나와 등 동아시아 지역의 전후 질서 재편 과정에서 미군과 소련의 영향력이 충돌하며 냉전의 불씨가 시작되었다. 소련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념 대립이 확산되던 이 시기 각국의 정치 변화, 군대 창설, 경제 구조, 국제 정책 등이 냉전을 촉발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게다가 한반도에서는 1950년 6·25전쟁이 일어났다. 6·25전쟁은 냉전 시기 최초로 벌어진 열전으로, 냉전이 언제라도 대규모

3) 박동찬, 『6.25전쟁기 민사작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4 참고. 군정(군사정부)는 전승국 군대가 패전국과 그 식민지를 점령하고 관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통치기관이다. 군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1930년부터였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제2차 세계대전부터였다. 1940년 7월 미 육해군 합동교범인 『야전교범 27-5, 군정』 발간하고, 1943년 12월 『군정과 민사』로 개편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아프리카, 시실리, 이탈리아 남부에서 미군이 터득한 경험을 기초로 작성했다. 이 교범은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고 군정을 실시하는데 직접적인 지침이 되었다.

4) 연합군정이란 2개 이상의 국가가 한 지역이나 국가를 군사적 영향력의 범위에 따라 나누어 시행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서 정리했다.

병력과 무기를 동원한 물리적인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었다. 그리고 현재 냉전이 종식되었음에도 한반도의 분단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 글은 그 성과를 바탕으로 군사사적 관점에서 정리해보려고 한다. 먼저 전후처리와 군정에 대해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아시아에서 진행되었던 전후처리의 특징을 살펴보고, 근대 전쟁과 군정의 역사적 맥락을 짚어볼 것이다.⁵⁾ 이것은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고 군정을 실시함에 있어 일본을 제외하고 한반도에만 군정을 실시했던 배경을 알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데 의미를 두었다.

두 번째는 일본이 항복하고 미군이 38선 이남을 군사점령하는 과정이다. 조선총독부는 연합군에 항복하고 통치권을 이관했다. 당시 조선에 주둔했던 일본군의 규모와 대응, 통치권자로 38선 이남을 점령하게 된 미군의 점령 계획과 준비 과정을 따라가 볼 것이다.

세 번째는 미군의 일본군 무장해제 실시와 특징을 검토해볼 것이다. 1946년 1월 4일 미군정청이 설치되기 전 전술부대에 의한 작전형 군정이 시행되던 시기의 군사적 행동과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물론 지역에 군정부대가 점령하여 지역형 군정을 실시하지만 1945년은 전체적으로 전술부대에 의한 작전형 군정의 성격이 강했다.

5) 군정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는 육군본부, 『세계군정사 : 2차대전을 중심으로』(육군본부 군사연구실, 1983), 박동찬, 『6.25전쟁기 민사작전』(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4.)를 소개할 수 있다.

2. 작전한계선 결정에 따른 군정

1) 연합군의 동아시아 점령

제2차 세계대전 후 유럽과 아시아에서는 전후처리가 시작되었다. 연합국은 추축국, 추축국의 점령지 및 식민지를 점령하고 군정을 실시했다. 1945년 5월 7일 독일이 항복하자 유럽에서 전후처리가 먼저 시작되었다. 연합군은 추축국인 독일을 무장해제 하기 위해 서쪽 지역은 미국·영국·프랑스, 동쪽 지역은 소련이 분할 점령했다. 게다가 수도인 베를린 역시 동서로 분할되었다. 1949년 5월 독일연방공화국(서독)이 수립되고, 1949년 10월 독일민주공화국(동독)이 수립되었다.

연합국의 분할 점령은 전범 국가가 더 이상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이다. 유럽의 상황을 본다면 아시아의 전범국가는 일본이었다. 당시 일본군은 사할린, 쿠릴열도, 한반도, 만주, 중국, 몽고, 대만을 비롯하여 베트남, 인도까지 주둔하고 있었다. 연합국은 관계된 국가의 점령을 시작했다. 그러나 연합국은 일본에 대해서 독일과 다른 전후처리를 실시했다.

전범국가로써 일본은 가장 큰 변화를 맞이 해야하지만, 정치 권력의 중심이었던 일왕은 그대로 존속했고, 국토는 분할 점령되지 않았다. 게다가 정부기관이 그대로 유지되어 미군의 직접통치도 받지 않았다. 군정 실시 계획은 한반도로 바뀌었다.⁶⁾ 1945년 9월 2일

6) 한국처럼 전후처리로 인해 국가가 분할 점령되고 전쟁까지 치러야 했던 국가가 또 있다. 베트남은 인도차이나반도로 불리며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곳이다. 1945년 8월 23일 호치민 등의 독립세력이 괴뢰 정부인 베트남 제국을 멸망시켰고, 9월 2일 베트남이 독립을 공식 선언했다. 일본군은 행정력과 군사력을 넘기겠다고

‘연합국최고사령부 명령 제1호’에 따라 연합국의 각 점령지가 발표되었다.

- 미군 점령지역 : 일본과 인접 섬,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류큐(오키나와), 필리핀, 오가사와라(小笠原) 제도, 태평양 제도의 일본 위임통치 제도
- 영국군 점령지역 : 안다만제도, 니코발 제도, 미얀마, 태국, 북위 16도 이남의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말레이시아, 스마트라 등
- 호주군 점령지역 : 보르네오 영국령, 뉴기니아, 비스마크 제도, 솔로몬 제도
- 소련군 점령지역 : 만주, 북위 38도 이북의 조선, 사할린(樺太), 치시마 제도
- 중국군 점령지역 : 중국(만주 제외), 대만, 북위 16도 이북의 프랑스령 인도차이나⁷⁾

미국은 일본, 북위 38도 이남의 한반도, 태평양 일부 지역을 점령했다. 일본은 연합군이 점령하기로 결정했지만 일본군을 해체하고, 점령을 한 중심 국가는 미국이었다. 미국 해병대 제6사단 제4해병연대는 요코스카의 일본 제국 해군 기지에 상륙하여 기지 주변을 접수하고 제5상륙군단은 규슈에 상륙하여 점령군을 배치했다. 이후 1945년 연말까지 태평양전쟁에서 활약했던 미군 사단 16

하며 베트남에서 계속 주둔했다. 프랑스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베트남을 식민지로 유지하려고 하자 베트남은 이에 맞섰다. 인도차이나 전쟁에서 1954년 프랑스가 패배한 뒤 제네바 회담에서 베트남의 독립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전후처리라는 명분으로 17도선을 기준으로 북쪽은 중국이 남쪽은 영국이 군사점령을 시작했다. 결국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각각 독립 정부가 수립되었다. 1955년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다.

7) 국사편찬위원회, 「일반명령1호로 연합군진주지역 분담 결정」, 『자료대한민국사 제1권』

개, 총 50만 명 이상이 후속 부대로 상륙하여 일본 곳곳에서 일본 제국 경찰, 일본군, 그 외 국민의용대 등 기타 준군사조직들의 무장해제를 집행하고 점령군 임무를 수행했다. 또한 영국군을 비롯하여 호주군, 뉴질랜드군, 인도 제국군 등으로 구성된 영연방 군대들도 시코쿠(四國)와 주고쿠(中國) 지역을 점령했다. 중국 국민혁명군의 경우 중부(中部) 지역을 군정 지역으로 배정받아 제67사단을 보냈으나, 선견대가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국공내전이 격화됨에 따라 파병을 중지했다.

중국은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었던 중국 내는 물론이고, ‘만주’, 몽골(내몽고와 외몽고)⁸⁾, 대만까지 전후처리의 직접적 대상 국가였다. 만주와 대만을 제외하고 중국 내에만 100만명이 넘는 일본군이 무장한 채 항복을 선언했다. 중국지역 전후처리는 일본군의 무장해제와 송환을 골자로 진행되었다. 연합국의 일원인 중국 국민정부는 일본을 상대로 항복 접수를 시작하며 일본군을 해체시켜 갔다. 그러나 국공내전이 변수로 작용하여 일본군에 대한 무장해제는 전략적으로 진행되었다. 국민정부는 공산당과 교전 상황에서 일본군을 활용하고자 했다.⁹⁾

화북지역에 집중 배치되었던 일본군의 무장해제와 치안유지를 위해 장제스는 국민정부군이 도착하는데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미군에 병력 지원을 요청했다. 1945년 9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진주한 미군수는 해병대가 6천여 명, 해군이 5만 3천여 명이 있었고, 그 밖에 난징 지상근무요원과 주둔병력이 6만여 명이었다.

8) 몽고의 일본군 무장해제를 명분으로 중국은 몽고를 점령했다. 몽고는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1911년 독립을 선언하지만 실효성이 없었고, 다시 1924년 11월 26일 독립선언을 하며 몽골인민공화국을 성립시켰다. 1946년 2월 중국은 외몽골만 몽골인민공화국을 인정하고, 내몽골은 1947년 5월 중국의 자치구로 편입하여 네이멍구로 명명했다.

9) 황선익, 「중국 관내지역 일본군 무장해제와 韓人 병사」, 『한국학논총』 44, 2015 참고.



〈그림 1〉 소련군의 웅기·나진 작전 상황도
(1945년 8월 9일 ~ 12일)

출처 : 『6·25전쟁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156
쪽. 재인용

소련은 1945년 8월 9일 0시 대일선전포고를 하고 새벽에 참전하여 동·서·북 3방면에서 만주 중앙을 향해 진격했다. 미소 간에 합의한 바대로 그들의 목표는 만주였다. 만주와 한반도를 그 전략적 목표에 놓고 동시 진공한 것은 아니었고, 한반도는 주된 목표에서 배제되어 있었다. 그들은 만주 전역(戰役)의 일환으로 조(助) 공격부대로 하여금 만주지역에 관련되어 있는 한도 내에서 북한작전을 수행하도록 했다. 8월 9일 경흥을 점령하고, 12일 비교적 소규모의 병력으로 웅기와 나진에 거의 무혈로 진주한 상태에서 8월 13일 청진 상륙작전을 개시했다. 소련은 일본군 소규모의 저항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8월 16일 청진 항구와 시가지로 들어갔다.¹⁰⁾ 대체로 소련은 일본과 별다른 전투 없이 38도선 이북의 한반도를 점령했다.

만주의 일본군 무장해제를 하게 된 소련은 중국군이 만주로 들어오는 것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만주에서 동북경제합작을 중국에 요구했다. 만주에 진주한 소련은 3개월이 되는 1945년 11월 철수가 끝났어야 했다. 그러나 몇 차례의 지연 끝에 소련의 철

10) 이완범, 『한반도 분할의 역사』,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3 참고.

군은 1946년 4월 말에 가서야 완료되었다. 이것은 1945년 후반부터 1946년 초반의 만주지역을 둘러싼 중국의 복잡한 국내외 상황을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중국의 이후 상황을 결정하는데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¹¹⁾

소련은 38도선 이북의 한반도도 점령했다. 소련은 북한군을 향후 18개월 안에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군대로 육성하겠다고 결정했다. 이 방침에 따라 소련은 철군 이후에도 4,300명 가량의 군사전문가들을 잔류시켰으며, 북한군 약 14개 사단을 무장시킬 수 있는 재래식 무기와 10개 사단 규모의 장비를 남겼다. 그리고 비밀리에 잔류한 소련 군사전문가들과 새로 파견한 군사고문관들로 하여금 북한군의 편성과 전투 훈련 등 군사 전반에 걸쳐 김일성 정권을 지도했다.¹²⁾

2) 한반도의 연합군정과 군사회의

1943년 12월 카이로 회담 선언에서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가 논의되고 ‘적절한 시기’에 독립시킨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회담에서 만들어진 총론은 연합국의 결정과 판단이 있어야 했지만, 1945년 4월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망하고, 부통령 트루먼이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다.

군사회담이 계속되는 동안 연합군은 일본에 대해 막바지 전쟁을 준비했다. 1945년 11월 1일 약 70만 명의 병력을 동원해 큐슈(九州)로 상륙한다는 올림픽작전(Operation Olympic)은 8월 17일 일본 본토 전략 폭격을 시작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곧이어 1946년 3월

11) 정형아, 「전후 소련의 만주지역 철군문제와 미중소의 이해관계(1945-1946)」, 『역사와 실학』 61, 2016 참고.

12)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1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150~192쪽 참고.

1일 도쿄를 향해 상륙하는 코로넷 작전(Operation Coronet)으로 일본을 점령할 계획이었다. 이때 소련은 만주, 한반도 북부, 사할린, 쿠릴열도로 진공하기로 했고, 일본 본토 점령을 위해 홋카이도(北海道) 상륙도 준비했다. 영국도 말레이반도로 병력 이동을 시작했고, 중국도 총공세를 준비 중이었다.¹³⁾

충칭에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9월 11일 미군과 연합하여 국내진공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또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대인 한국광복군은 미국 OSS(미전략첩보국)와 연합하며 요원들을 훈련하여 1차로 8월 18일 한반도에 요원을 침투시키는 '독수리작전' 시행을 눈 앞에 두고 있었다.¹⁴⁾

한편으로 미국은 3부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군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태평양 지역의 미군정 총책임은 1945년 4월 미 태평양육군사령관에 임명된 맥아더 장군에게 주어졌다. 맥아더는 군정책임자로 크리스트 준장을 임명했다. 8월 5일 미 태평양육군사령부 참모장 직속으로 군정치(Military Government Section)을 설치하였고, 군정치는 1945년 11월로 예정된 일본 본토 상륙작전인 올림픽 작전에 기초하여 이 지역에서 시행할 군정 계획을 1945년 7월 완성했다. 미국 전쟁부는 7월 22일자로 군정단과 군정중대의 편제 및 장비를 공표했다. 이것은 군정단과 군정중대는 주한미군정사령부 예하에서 남한의 도(道)-시군(市郡) 차원의 지방을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기본 단위가 되었다.¹⁵⁾

제2차 세계대전 이후 38선 이남의 미군정 실시는 1945년 9월 7일 미 태평양육군사령부 포고 제1호에 근거를 두었다. 이보다 앞서 8월 11일 미군의 일본 및 한반도 점령 계획은 블랙리스트 계획

13) 하야시 사부로 지음·최종호 옮김, 『태평양전쟁의 지상전』, 논형, 2021, 235~236쪽.

14) 한시준, 『대한민국임시정부 III-중경시기』,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참고.

15) 국사편찬위원회, 『해제』, 『미군정기군정단, 군정중대문서』, 2000 참고.

의 일환으로 38선 남부 점령 임무를 부여받은 미 제10군이 추진하고 있었다. 미 제10군은 사령부 내에 군정과를 설치하고 군정 계획을 수립했다.

8월 15일 태평양미육군총사령부는 ‘작전지시 제4호’를 발표했다. “일본(카라후토 제외)과 한국(북위 38도 이남)을 점령하고, 통제권을 확립하여 군사 정부를 수립하고 항복 조건을 부과” 하도록 했다. 미 제6군, 제8군, 제24군단 사령관에게는 16개 항을 시행하도록 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모든 무장된 일본군의 항복을 받는다.
- 일본군과 그들의 보충군을 무장해제하여 해산시키고 상황이 허락하는 한 신속하게 군사 자원의 통제권을 확립한다.
- 점령군의 작전에 불리할 수 있는 개인과 단체의 활동을 억압한다.
- 군사정부를 수립하고 시민들 사이에서 법과 질서가 유지되도록 보장한다.
- 동맹군 포로 및 민간인피억류자를 지체 없이 회복, 구제 및 송환한다.

미 제10군 군정과에서는 한반도 점령과 함께 실시될 군정의 조직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1940년 처음 발행된 군정에 관한 교범 『FM 27-5』을 1943년 개편한 『군정과 민사(Civil Affairs Military Government)』를 지침으로 활용했다. 한편 제10군은 새로 군정부대를 창설하지 않고 제10군 고사포부대의 본부 및 본부 포대를 군정부대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군정 계획은 미 제10군에서 제24군단으로 임무가 바뀌었다.¹⁶⁾

16) 남정욱, 『한미 군사 관계사 1871~200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205~207쪽.

미 태평양육군사령부 군정처는 필리핀의 마닐라 시청에 있는 사무실에서 완전한 참모기능을 갖추고 1945년 8월 중순까지 군정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야전에 있는 군정장교들을 위해서 포고문, 명령, 지시, 규정, 운영절차 등을 준비했다. 둘째, 군정기관의 조직기구, 편성표, 장비품 편성의 준비, 군 작전에 필요한 보급소요의 판단과 주민들의 비상 구급, 이주민을 위한 구호품, 위생 약품 등의 소요 판단을 작성하여 준비했다. 셋째, 일본 정부의 항복 조건 준수 및 통제를 위한 제반 계획의 작성과 최고사령부의 관계 내용 포고문을 준비했다.

또 8월 28일 맥아더 사령부는 각급 전투부대에 점령에 관한 업무를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첫 번째는 일본에 대한 군의 통제는 연합군최고사령관에 의해서 행해진다, 두 번째는 연합군최고사령관은 일본의 통제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왕과 정부 조직을 통해서 행한다, 세 번째는 제6군사령관과 제8군사령관, 제24군단장은 최고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관할지역의 일본 행정 기관 및 일본인을 감독한다, 네 번째는 일왕과 일본 정부는 최고사령관이 지시를 내리면 지체없이 지시된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맥아더의 연합군최고사령부의 주요 참모들이 1945년 8월말 마닐라를 출발하여 일본 도쿄에 도착했다. 10월 21일 동경의 군정요원은 장교 144명과 사병 134명이었다. 그러나 최초 일본을 목표로 설치된 군정처는 곧 해체로 결정되었다. 9월 25일 미태평양육군사령부 참모장 서더랜드 중장은 군정처 요원들에게 해체에 관한 몇 가지 사항들을 전달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일본에는 군정기관이 없게 된다, 군정처는 해체될 것이다, 군정처의 대부분 인력은 한국의 제24군단에 배속될 것이다, 잔여 인원은 신설된 특별참모부에 배속된다는 것이었다.

이 내용은 1945년 10월 4일 일반명령 제244호에 의거 군정처 폐지로 현실이 되었다. 이에 따라 전후 일본 군정을 위해 양성된 대부분의 미 군정요원들이 미 제24군단에 배속되어 군정 활동을 하게 되었다.¹⁷⁾ 결국 8월 15일 작전지시 제4호와 달리 군정은 한반도 38선 이남에만 설치하는 것으로 되었다.

군정은 전후처리의 과정이다. 먼저 군정의 현재적 개념을 보면, “점령지역에서 이를 책임지고 있는 군 지휘관이 법률의 원리, 원칙 및 전쟁 규칙에 의거하여 입법, 사법, 행정권 등 통치권을 부여받아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한다.¹⁸⁾ 군정이 시작된 시기의 군정 개념도 유사하다. 미육해군 합동교범으로 1947년 10월 간행된 『민사군정(Civil Affairs Military Government)』에서 군정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군정(군사정부)이란 적, 동맹국 또는 국내 영토의 토지, 재산 및 주민에 대해 점령군이 행사하는 최고 권한으로 한정되고 정의된다. 군정은 군대가 강제 또는 합의에 따라 그러한 영토를 점령했을 때 행사되며, 주권자 또는 이전 정부의 권한을 대신한다. 점령군에게 넘겨진 통제권은 국제법 규칙과 확립된 전쟁 관습에 의해서만 제한을 받는다.”

이러한 군정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진행되었다. 1943년 1월경부터 연합국은 추축국 또는 추축국에 의해 점령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작전을 준비했다. 시칠리아 침공작전을 계획하면서 연합국은 점령지에 대한 향후 대책을 구상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점령지 관할권 문제를 포함한 군정에 관한 계획도 수립했다. 연합군사령부

17) 육군본부, 『세계군정사 : 2차대전을 중심으로』, 육군본부 군사연구실, 1983, 295~301쪽.

18) 육군본부, 『육군군사술어사전』, 육군교육사, 1988.

는 1943년 5월 1일 처음 연합군정(AMGOT) 설립 계획을 마련했다. 한편 프랑스에 대해서는 군사점령 이후 군정이 아닌 민사활동을 통해 프랑스 임시정부를 지원하고 프랑스 전 지역의 행정을 프랑스인 스스로가 통제하게 한다는 정책을 시행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사례에서 보듯 제2차 세계대전의 군정은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전개되었다. 하나는 ‘군사점령-군정-재건’의 과정을 거치는 유형으로 대체로 추축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오스트리아와 독일이 여기에 포함된다. 다른 유형은 ‘군사점령-민정(민사)-재건’의 과정을 거친 국가들이다.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등으로 이들 국가는 추축국에 의해 점령된 지역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유럽과 달리 태평양지역에서는 추축국인 일본이 ‘군사점령-민정(민사)-재건’의 유형을, 일본에 점령되었던 지역은 ‘군사점령-군정-재건’의 유형을 따랐다. 오키나와, 한국 등이 그러했다. 태평양 지역에서는 미국과 영국이 주도한 유럽지역의 ‘연합군정’과 달리 미국이 독자적으로 군정을 실시한 것은 큰 특징이다.

미국이 적의 영토에서 군정을 실시한 대표적 사례는 제2차 세계대전의 추축국인 이탈리아와 독일에 실시한 것이고, ‘적이나 반군의 점령지에서 회복된 국내외 지역’의 대표적 사례로는 일본 패망 후 한국에 실시한 미군정을 들 수 있다. 오키나와의 경우 한국에서 미군정을 실시하는데 참고 사례가 되었다. 미군은 전술부대의 상륙과 함께 군정부대를 투입하여 전술부대 작전과 병행하여 군정부대를 운영했다.

또 다른 사례로는 필리핀에서 시행한 것이다. 맥아더는 가능한 탈환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필리핀 정부에 이전하고, 군정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민정부대는 군정을 실시하지 않고 원주민 귀향, 피란처 제공, 긴급 구호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민정부대의 지

원 아래 필리핀은 빠르게 정부와 행정기능을 복구하였고, 민정부 대도 조기에 종료했다.¹⁹⁾

이를 정리해보면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이 군사작전의 한계선을 38선으로 하여 남과 북으로 점령한 뒤 연합군정을 수립한 것이며, 이들은 공동의 정부를 수립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했다. 1945년 12월 소련의 수도 모스크바에서 미국, 영국, 소련은 외상회의인 모스크바3상회의를 열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여러 지역의 문제점에 대하여 협의했다.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는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일정 기간의 신탁통치에 관하여 협의한다”는 것을 ‘모스크바협정’에 포함시키고, 곧 미국과 소련이 군사회담을 개최할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1946년 1월 16일 서울 덕수궁에서 미소공동위원회를 열기위한 예비회담이 열렸다. 연합군정의 주체인 미국과 소련의 대표자가 모여 한반도에 공동정부를 어떻게 수립할지 협의하는 군사회담이었다.

19) 박동찬, 『6.25전쟁기 민사작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4, 참고.

3. 총독부에서 군사정부로 이관된 통치권

1) 일본군의 현황과 군사정보 인계

1945년 8월 15일 이후 일본군의 병력은 550만명에 달했다. 각 지역의 일본군을 무장해제 한 다음 일본 본토로 송환하는 것은 군사작전의 일환으로 가능한 빠르게 진행되었다. 해방 직후 조선 주둔 일본군은 25만 명 내외였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 수치에는 약 5만 명의 조선인을 포함한 것이다.

(표 1) 일본 육군 지역별 병력수

연도	일본, 조선	만주	중국	남방	합계
1937년 12월	25만	20만	50만	.	95만
1938년 12월	25만	22만	68만	.	115만
1939년 12월	26만	27만	71만	.	124만
1940년 12월	27만	40만	68만	.	135만
1941년 12월	56.5만	70만	68만	15.5만	210만
1942년 12월	50만	70만	68만	52만	240만
1943년 12월	70만	60만	68만	92만	290만
1944년 12월	131만	46만	80만	163만	420만
1945년 8월	294만	66만	106만	81만	547만

출처 : 야마다 아키라 지음, 윤현명 옮김, 『일본, 군비확장의 역사』, 어문학사, 2014, 186쪽 [표19] 재인용.

조선인 징병자들은 미군이 도착하기 전에 일본이 제대조치를 했다.²⁰⁾ 1947년 4월 일본 유수업무국선만잔무정리부(留守業務局鮮

20) 김윤미, 「1945년 해방공간에서 교차하는 미군과 일본군의 이동」, 『지역과 역사』 48, 2001, 315쪽.

滿殘務整理部)에서 작성한 자료에 조선 남부 주둔 일본군의 배치 현황이 자세히 제시되어 있다.²¹⁾ 조선군관구인 경성사관구·대구사관구·광주사관구가 편성되어 있었고, 제17방면군인 부산요새관구·여수요새관구, 제주도를 포함했다. 경성일본군연락부에서 작성한 일본군 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2> 해방 직후 조선 남부의 일본군 병력 현황

관구	인원
경성사관구	57,110
대구사관구	13,480
광주사관구	34,710
부산요새관구	15,420
여수요새관구	680
제주도 내	58,320
합계	179,720

출처 : 京城日本軍連絡部長, 「職員表」, 『在南鮮日本軍部隊概況報告』, 1945.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C13070040900)

경성사관구는 강원도·경기도·충청남북도, 대구사관구는 경상남북도, 광주사관구는 전라남북도, 여수요새관구는 여수지역, 부산요새관구는 울산에서 남해에 이르는 경남 해안지역을 관할했다. 1945년 8월 15일 이후 일본군의 주요 부대는 대구, 부산, 여수, 광주, 목포, 마산, 정읍, 전주, 이리, 대전, 청주, 인천, 경성 등에 배치되어 있었다. 철도와 항만을 중심으로 교통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이러한 편제는 미군의 일본 상륙을 막겠다는

21) 留守業務局鮮滿殘務整理部, 「朝鮮軍管区」 『北方鮮滿部隊編成補充担任部隊一覽表 昭和22年4月』, 1947(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C13010271000).

최후의 작전으로 1945년 2월 시행한 ‘본토결전(本土決戰)’ 체제였다.²²⁾

일본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비롯하여 9월 2일 연합국은 명령 제1호를 통해 일본을 포함한 일본의 지배하에 있는 모든 지역의 정보 인계를 요구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육상, 해상, 항공, 방공부대의 각 위치에 있는 장병의 수를 표시한 표
2. 모든 육군, 해군, 비군용 항공기의 수, 형식, 위치와 그 상태에 관하여 완전한 정보를 주는 표
3. 일본국과 일본국의 지배하는 모든 수상, 잠수 해군 함정과 보조 해군 함정으로서 취역(就役)의 것 또는 취역 중에 있지 않은 것과 건조에 있는 것의 위치, 상태, 운항을 표시한 표
4. 일본국과 일본국의 지배하는 모든 총 톤수가 백톤을 넘기는 상선으로서 취역 중에 있는 것의 위치, 상태, 운항을 표시한 표
5. 일체의 기뢰 제원, 기타의 육상, 해상 또는 공중의 행동에 대한 장애물의 위치, 시설상황과 이에 관련한 안전 통로에 관한 완전하고 상세한 지도와 부가 정보
6. 비행장, 수상기 기지, 대공방비시설, 항만, 해군기지, 물자저장소, 상설 혹은 가설 그 육상, 연안방비시설, 요새, 기타의 방비 지역을 포함한 모든 시설, 건조물의 위치와 설명
7. 연합군 포로, 피억류자의 모든 수용, 기타 억류자의 위치

일본은 이와 관련하여 정보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일본군은 유수명부(留守名簿)를 비롯하여 소유한 재산에 관련한 현황 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연합군에 넘겼다. 유수명부는 일본 본토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파견된 일본군의 명부로, 당시 각 지역에 배치

22) 陸軍省, 「第17方面軍」 『部隊行動表 昭和20年』, 1945(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C13020875800).

된 현황을 기록한 명부이다.²³⁾ 일본군이 소유하고 있던 군사적 자산을 기록한 장부는 한반도 38선 이남 주둔 일본 육군이 작성한 국유재산수수증(國有財産授受證)²⁴⁾, 일본 해군이 작성한 진해경비부인도목록(鎭海警備府引導目錄)²⁵⁾이 대표적이다. 연합군은 이 정보들을 토대로 무장해제의 범위 등 전후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다.²⁶⁾

2) 미군의 점령작전 전개

1945년 9월 2일 일본 도쿄 앞바다에 정박한 미군함정 미주리호 선상에서 조인식인 거행되었다. 일본과 미국이 조인한 문서에는 일본이 연합국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며 조건 없이 항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일본군은 무장해제하며 해외 영토와 점령지를 모두 포기하겠다고 서명했다.

곧이어 연합군총사령부는 1945년 9월 2일 ‘일반명령 제1호’를 발표해 북위 38도선 이북의 한반도에 주둔한 일본군은 소련 극동군 최고 사령관에게, 북위 38도선 이남의 한반도에 주둔한 일본군은 미육군 태평양사령부 사령관에게 항복할 것을 지시했다. 곧이

23) 유수명부에는 군인으로 동원된 16만여 명의 조선인 명단이 있어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1993년 일본 정부에서 이관되어 현재 국가기록원에 보관되어 있다.

24) 아시아역사자료센터에서 공개하고 있는 자료 중 대구사관구경리부에서 작성한 이 보고서는 國有財産授受證 昭和20年(C13020899500), 國有財産授受證 昭和20年(C13020905500), 國有財産授受證 昭和20年(C13020907100), 國有財産授受證 昭和20年(C13020911400) 등이다.

25) 아시아역사자료센터에서 제공하는 사료 중 해군의 ‘引渡目錄’은 총 548책이다. 이중 진해경비부 인도목록은 鎭海警備府 引渡目錄 1/3(C08010524300), 鎭海警備府 引渡目錄 2/3(C08010527900), 鎭海警備府 引渡目錄 3/3(C08010529000)이 있다.

26) 아시아역사자료센터에서는 일본 육군의 ‘중전처리(終戰處理)’에 대한 자료는 별도의 항목(防衛省防衛研究所>陸軍一般史料>中央>終戰處理)으로 편철하여 제공하고 있다. 1945년 9월 작성된 「昭和20年9月 終戰機關連絡報綴」(C15010262200)를 비롯하여 550건에 이르는 문서가 있다.

어 9월 7일 38도선 이남에 미군정 실시를 선포한 ‘미육군 태평양 사령부 포고 1호’가 발표되었고, 9월 8일 미 육군 24군단이 남부 지역 점령을 위해 인천에 상륙했다.

9월 9일 오후 4시 조선총독부 건물에서 항복문서 조인식이 있었다. 연합군측과 일본군의 정전협정에 의한 항복문서 조인식이었다. 그 결과 일본군은 미군에 “조선 북위 38도 이남의 일본군 군적이 있는 자 전부와 모든 군사시설, 병기, 선박, 항공기 기타 모든 군기재 및 군소유물을 정식으로 그리고 무조건으로” 미군에 양도하기로 했다. 조선총독부 건물의 일장기가 내려가고 성조기가 올랐다. 항복조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항복조약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 1) 우리는(小官等) 명(大命)에 의하여 천황, 일본 정부 및 대본영을 대표하여 서력 1945년 7월 26일 아메리카합중국, 중화민국, 대영제국 각 정부 공동 발표, 소련의 추가 찬동하는 포츠담선언의 조약을 수락함. 상기 4개국을 이후 연합국이라고 칭함.
- 2) 우리는 대본영과 일본 및 일본군 지휘하에 있는 모든 군대는 어떤 주둔지(何處)에 있음을 불문하고 연합군에 무조건 항복을 선포함.
- 3) 우리는 일본군 및 일본 신민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적대행위의 즉시 정지, 선박·항공기·군사민간시설의 파괴방지, 그 보호, 연합군 최고사령관 또는 동 사령관의 명에 의한 일본 정부 대리기관의 포고의 모든 요망 이행을 명함. (중략)

결론

우리는 우리의 행정 및 관할하의 조선 북위 38도 이남의 지역 및 그 지역 내 모든 도서(島嶼)에 일본군 군적이 있는 자 전부와 모든 군사시설, 병기, 선박, 항공기 기타 모든 군기재 및 군소유

물을 정식으로 그리고 무조건으로 재조선미국군사령관에 양도한다.²⁷⁾

미국은 군사정부를 수립하고, 그 외의 정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미군정은 여운형이 이끌었던 건국준비위원회의 활동을 부정했고, 조선총독부의 관리를 유임하려고 했던 조치를 바꾸어 모두 해임했다.²⁸⁾ 충칭에 위치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도 정부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것을 통보했다.

조선총독부 등이 항복문서에 서명하고, 통치권을 이양받은 연합군은 군사점령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미군은 일본과 조선을 점령하는 작전을 ‘블랙리스트(Blacklist)’라고 명명하고 태평양미육군사령부에 책임을 맡겨 태평양에 배치된 모든 육군과 해군 부대의 제1순위 임무로 진행했다. 조선의 경우 점령 대상 지역은 1단계 서울과 인천 지구, 2단계 부산 지구, 3단계 군산 지구였다. 제24사단 산하에는 서울·경기·강원을 담당하는 제6사단, 전라·제주를 담당하는 제7사단, 경상도를 담당하는 제40사단으로 대략 1945년 10월 말 배치를 완료했다.

8월 9일 인천으로 상륙한 제7사단, 9월 16일 부산으로 진주한 제40사단, 9월 29일 제주도에 상륙한 제7사단의 이동 경로와 병력 배치와 인원수는 〈그림 2〉와 같다. 서울, 수원, 천안, 조치원, 청주, 대구, 강경, 군산, 이리, 정읍, 광주, 목포, 여수, 대구, 밀양, 부산, 제주도의 상륙일과 인원이 명시되어 있다.

27) 1945년 9월 9일자, 『매일신보』 호외 (국사편찬위원회, 『자료대한민국사 제1권』, 「在조선 일본군 및 총독의 항복문서조인식 거행」

28) 미군은 조선총독부의 행정체계를 그대로 넘겨받았다. 그러나 조선총독부에는 군사관련 업무 부서가 없었으므로, 새로운 부서를 만들었다. 이것은 향후 한국의 국방기관 설치의 시초가 되었다.

〈그림 2〉 일본군 연락반에서 작성한 미군의 상륙 현황



출처 : 兵站交通班, 『歸還輸送に關する綴』, 防衛省防衛研究所, 71쪽(中央-軍事行政人事-251).

초기 임무는 일본군을 무장해제하고, 교통통신 통제권을 확립하는 것이었다. 세 지구는 조선 남부에서 대규모 항구, 정치·경제·행정의 중심지, 그리고 군사시설 및 교통의 요충지라는 공통적인 특성을 갖는다. 미군이 거점지역으로 설정한 세 지구는 일본군의 거점이기도 했다.²⁹⁾

조선을 담당한 병력은 제10군으로, 그 예하 3개 보병사단으로 편성된 제24군단이었다. 1단계와 2단계의 최소병력은 78,690명, 이후 86,542명을 증강할 계획이었다. 여기에 3단계 최소병력 23,435명을 포함하면 총 병력은 109,977명이었다. 이것은 군정요원을 제외한 숫자였다.

‘블랙리스트’ 계획에서 조선 주둔 일본군의 병력은 육군과 해군을 합쳐 27만 명으로 추정하고, 3만 5천 명의 민병대가 있다고 보았다. 이후 전쟁부 자료와 태평양지구 총사령부의 적 병력 평가서는 8월 경 37만 5천 명으로 상향 조정했다. 조선에는 위험한 자살특공대 훈련소도 있다고 추정했고, 항공기는 총 840대로 이 중 최소한 230대는 전투기로 추정했다. 이렇게 추산한 일본군 병력은 미군 제24사단이 조선에 상륙하자마자 과대평가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³⁰⁾

29) 송정현, 「1945년 미군의 남한 진주과정과 ‘베이커-포티(Baker Forty)’ 작전지역의 설정배경」, 『전북사학』63, 2021 참고

30) 국사편찬위원회, 『주한미군사1』, 2014. 60, 63쪽.

4. 무장해제라는 군사작전

1) 일본군 무장해제와 군수물자 처리

미 제24군단은 일본군의 전투서열 해제를 지시하면서 세부 계획은 일본군이 스스로 세울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조선군관구사령부에서 일본군 귀환 계획을 수립하고 제24군단으로부터 승인을 얻었다. 미군은 서울에 있던 일본군의 경우 9월 10일까지 무장해제 했지만, 25%는 무장해제를 하지 않고 서울의 경비를 허가했다. 조선군사령관에게 일본군을 유지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인데, 그 외 지역은 10월 20일까지 무장해제를 완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단, 각 지역의 일본군을 수송해야 하는 부산은 9월 25일까지 무장해제를 완료하도록 했다.³¹⁾

미군은 일본군 무장해제를 위한 무기와 군수품을 지정된 장소에 집결시켰다. 인계된 병기 격납을 준비한 곳은 천안, 조치원, 대전, 이리, 정읍, 대구, 밀양 등 미군 장교들이 책임을 맡고 있는 미군 연락반이었다.³²⁾

일본군이 작성한 문서 중 무기와 군수물자 처리에 대한 지침은 9월 27일 군참모장이 교통병참반에 지시한 ‘38도 이남 조선군관구부대 귀환수송요령안’에서 확인된다. 이 문서에는 위생재료, 수의재료, 군용동물 처리에 관한 지침이 명시되어 있다. 육군부대와 병원의 위생재료처리는 별도의 지침이 하달되었고, 수의재료는 다

31) 유지아, 「전후 재조선일본군의 무장해제 과정에서 형성된 한미일관계」, 『한일관계사연구』28, 2007. 182~184쪽.

32) 森田芳夫·長田かな子編, 『朝鮮終戦の記録 : 資料篇 2』, 巖南堂書店, 1979, 338~339쪽.

른 군수재료와 함께 미군에 인계하도록 했다. 군용동물 처리는 미군의 지시를 받고, 지시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각하도록 했다. 그리고 ‘조선 내 육군부대 복원에 관한 세부 지시’에 따르면 소지하고 있던 병기 탄약 이외의 군수품은 승차지 혹은 승선지에서 미군에 인도하라고 명기되어 있다.³³⁾

일본군의 장비와 시설을 처분하는데 기본 원칙은 연합군최고사령부가 9월에 하달한 ‘점령 지령 제2호’에 들어있다. 전투용 장비는 미군이 정보 분석 및 연구용으로 사용하거나 기념품, 전리품으로 쓸 것을 제외하고 파괴했다. 민간 소비재로 사용할 수 있는 보급품은 민간인에게 공급하도록 했다. 군사시설은 추후 지시가 있을 때까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약 1주일 뒤 제24군단의 ‘행정 명령 제19호’가 발령되었다. 일본군의 장비는 네가지로 구분되었다. 첫째는 무기, 탄약, 폭발물, 장비와 보급품이었고, 둘째는 해군 선박과 해군에 징발된 보조 함선, 셋째는 항공기, 넷째는 시설, 기지, 요새였다.

제24군단 예하 부대의 관할지역에서 발견된 선박과 시설물은 파괴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했다. 그 밖의 자동화기, 항공기, 폭탄, 항공기용 무전기, 레이더 장비 등을 포함한 군사장비는 파괴했다. 파괴 방법은 따로 명시되지 않았다. 정보 분석과 연구에 필요한 품목이나 미군 부대가 자체적으로 사용할 장비, 민수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자, 전리품이나 기념품으로 쓸만한 품목, 기상장비는 예외로 두어 파괴하지 않았다. 제24단 병기참모부는 무기와 폭발물 처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현지 보관 지역에서 파괴하고, 그 외에는 부산항으로 옮겨서 처리하기로 했다.³⁴⁾

33) 兵站交通班, 『歸還輸送に關する綴』, 防衛省 防衛研究所, 1039~1047, 1131~1143쪽(中央-軍事行政人事-251)

34) 국사편찬위원회, 『주한미군사1』, 2014, 410쪽.

무기와 탄약 외에 미군이 유용하게 사용하거나 민간 경제에 사용할 수 있는 장비들은 남아있었다. 대표적인 물자는 일본군의 자동차와 군마였다. 일본군의 자료에 따르면 한반도 남부지역에는 군마 9,262필, 자동차 1,564대가 있었다.³⁵⁾

건설장비를 포함한 수많은 공병 장비도 미군의 작전을 위해 사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6년 3월 쓰지 못한 일본 공병의 물자가 많이 남아있었다. 일본군의 군수보급 장비 중 일부는 미군이 사용했지만 대부분 군정청에 이관되었다. 거의 대부분의 군수보급 장비가 1946년 2월까지 처분되었다. 일본군 군복과 군화 일부는 조선 경찰이 사용했다. 화학무기는 미군 전술부대에서 처리했고, 의료 장비는 군정청 보건국에 인계되었다. 통신 장비 중 일부는 미군의 작전에 사용했지만 대부분 군정청에 인계되어 민간 통신에 사용되었다.

항공기는 극동공군 제308폭격비행단 정보팀에서 조사한 뒤 11월 19일 모두 파괴했다. 전투용 항공기는 모두 파괴하고, 남은 잔해 일부는 물자통제회사에 인도했다. 수송기는 민간 항공사를 만들기 위해 군정청으로 이관하고 비행장에 있던 몇 대의 트럭은 미군이 사용했다. 1945년 12월 초까지 138대 항공기를 파괴하고, 6월 중순 항공기 처리는 완료했다.³⁶⁾

2) 연합군 포로 석방과 전쟁범죄자 처리

연합군이 전후처리에서 중요한 임무 수행이자, 큰 관심을 가졌던 것은 연합군 포로와 전쟁범죄자 처리였다. 1945년 9월 2일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일본 정부와 일본군 참모부에 “현재 일본인의 관리하

35) 京城日本軍連絡部長, 「職員表」, 『在南鮮日本軍部隊概況報告』, 1945(アジア歴史資料 センター, Ref.C13070040900).

36) 국사편찬위원회, 『주한미군사1』, 2014, 414쪽.

에 있는 연합국 포로와 억류민(민간인 억류자)들을 석방하고, 석방된 포로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의료 지원과 그밖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는 동시에 즉시 지정한 장소로 이송할 것”을 명령했다. 그리고 포로들의 신속한 석방과 귀환에 대하여 “일본인 관할하에 있는 모든 연합국 포로들은 군사작전의 일환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송환되어야 한다. 이 임무는 군사작전과 점령군 유지만큼이나 긴급한 사항이다”라고 하며 거듭 관심을 표명했다.³⁷⁾

미 제24군단 포로인수팀(Recovery Team)이 연합군 포로 석방 임무를 맡았다. 한반도에는 인천포로수용소, 서울포로수용소, 함흥 근처의 곤안포수용소가 운영되고 있었다. 대부분 미국군, 영국군, 호주군이였다. 미군이 확보했던 정보에 의하면 일본이 수용하고 있는 연합국 포로는 약 168,000명이고, 그 중 한반도에는 11~12개의 포로수용소에 약 2,500명의 연합국 포로가 수용되어 있다고 알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한반도에는 3개 포로수용소에 680명의 포로가 있었다.³⁸⁾

연합군의 포로 철수가 완료되고, 남은 임무들이 진행되었다. 그 중 하나는 포로수용소에서 전쟁범죄자로 여겨질 만한 일본인 장교들을 체포하고 기소하는 것이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도쿄의 태평양 미육군 사령부에서 열렸다.

미 제24군단은 군단 작전명령에 의해서 연합군 포로에 대한 전쟁범죄 행위자를 체포하겠다고 공표했다. 관련하여 자료에 따르면 “1945년 10월 9일경, 연합군 포로들에게 저지른 행위로 인해 일본군 8명이 체포되었다. 이 중 눈에 띄는 사람들은 아래와 같다. 조선의 모든 포로수용소를 관할하던 노구치 대령, 인천수용소의 마지막 소장이었던 오카자키 중령, 서울수용소를 관리했던

37) 국사편찬위원회, 『주한미군사1』, 2014, 221쪽

38) 조건, 「일제 강점 말기 조선주둔일본군의 조선인 포로감시원 동원과 연합군 포로수용소 운영」, 『한국근현대사연구』 67, 2013 참고.

고토 대위, 서울수용소의 부관 테라다 대위, 급여 담당자 모리토 미(森富) 중위, 그리고 서울수용소의 악명 높은 통역관 우시무라 상등병 등이 있었다. 이들 만큼 악명 높은 자들은 아니었지만, 10월 12일경 일본인 군사요원 7명이 더 체포되었고, 이에 총 15명이 감금되었다. 이들은 인천 부근에 제24군수지원사령부 관할 영창에 감금되었고, 1946년 5월 14일 일본으로 수송되었다. 방첩대(CIC)의 조사 이후,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확실치 않았던 다른 경비병들은 다른 일본 군대와 함께 일본으로 송환조치되었다.”고 한다.³⁹⁾

이들 15명 중 1947년 9월 15일 요코하마(橫濱)에 위치한 미 제8군 군사법정에 회부된 사람은 12명이었다. 군사재판에 회부된 12명 중 1명만 무죄 선고를 받고 11명은 유죄선고를 받았다. 무죄 선고를 받은 일본군 장교는 서울포로수용소장 고토대위였다. 유죄판결을 받은 일본군으로 주한연합군포로수용소 총책임자인 노구치 대좌가 22년, 인천포로수용소장 오카자키 중좌가 20년, 서울포로수용소 부관 테라다 대위가 37년, 인천포로수용소 군의과 미즈구치 소위가 사형, 서울포로수용소 통역 우시하자 오장이 10년형을 선고받았다. 군사법정에서 이들이 선고받은 죄명은 전쟁법규 위반과 포로학대였다.⁴⁰⁾

3) 일본군 명부 작성과 귀환

일본은 1945년 8월 25일 ‘제국육군복원요령세칙’⁴¹⁾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해서 일본군의 귀환을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일본 외 지

39) 국사편찬위원회, 『주한미군사1』, 2014, 225~256쪽

40) 남정옥, 『한미 군사 관계사 1871~200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201쪽.

41) 陸軍省, 『昭和20.8.18 帝國陸軍復員要領』, 1945.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C15010488800)

역 부대 복원은 9월 10일 제정된 ‘일본 외 지역 부대 복원 요령’에 의해 시작되었다. 인원, 군마, 군수품 등에 관한 각종 처리를 완료한 후, 수송계획에 따라 복원지로 이동하고 복원부대로서 실시하는 우수업무를 정리한 다음 편성을 해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⁴²⁾

우수업무에 대해서는 1945년 9월 23일 육군대신이 ‘외지부대우수 업무처리요령’을 하달했다.⁴³⁾ 우수명부는 일본 육군 소속의 군인과 군속 명단으로, 외지부대소속자의 현황과 우수택 관계 사항 등을 처리할 때 근간이 되는 자료로 성명, 본적지, 생년월일, 징집년, 임관년, 명역, 병종 등을 기록했다. 사망자연명부와 생사불명 자연명부 기록은 중일전쟁시기부터 사망자와 생사불명자에 대해 조사하여 작성하도록 했다.⁴⁴⁾

작성된 명부는 일본군과 정부뿐아니라 연합군에도 인계되었다. 조선 주둔 일본군의 귀환 세부 지침은 ‘38도 이남 조선군관구부대 귀환수송요령안’이 확인된다.⁴⁵⁾ 이 요령안은 부산 이외의 부대를 어떻게 철도로 부산항까지 수송할지 계획이었다. 이에 따르면 일단 승선하는 항구는 부산이었다. 귀환에 대해 미군과 일본군의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지침이었다.

일본은 미군이 상륙하기 이전 귀환을 준비했다. 1945년 8월 16일 조선총독부 교통국은 수송계획을 발표했다. 가장 먼저 수송하려던 것은 식량, 소금, 섬유, 잡화, 된장, 간장 기타 생필품이었

42) 厚生省社會援護局援護50年史編纂委員會, 『援護50年史』, (株)ぎょうせい(東京), 1997.

43) 陸軍省, 「陸普第1880号帝国陸軍(外地部隊)復員実施要領細則」, 1945.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C13070031200)

44) 朝鮮軍司令部, 「昭和20.9 終戦後における朝鮮軍電報綴(其の1)」, 1945.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C15010596600)

45) 兵站交通班, 『歸還輸送に關する綴』, 防衛省防衛研究所(中央-軍事行政 人事-251), 1131~1141쪽.

다. 그리고 여력이 있으면 일본인 수송을 시행한다는 방침이었다. 일본인 수송에서는 군사시설과 전력증강 관계 공사, 공장이나 사업장의 노무자를 순차적으로 수송하여 국가 기간산업의 인력 충원을 고려했다.

조선총독부의 귀환 방침은 일본의 상황에 따른 것이었다. 일본의 식량은 만주와 조선에서 공급되고 있었기 때문에 향후 일본은 심각한 식량난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다. 미군은 일본의 식량 문제를 고려하여 일본군을 모두 귀환시킬 수 없다며 제주도 등에서는 월동준비를 해야한다는 논의가 있었다.⁴⁶⁾ 이에 따라 귀환이 늦어질 것이라는 가정에서 제주도 주둔 일본군은 1946년 초여름까지 식량공급 계획을 세웠다.⁴⁷⁾

조선군사령부는 한반도 거주 일본인의 귀환 순서를 ①군인 가족, ②관공리 가족, ③민간인, ④관공리, ⑤군인으로 설정했다. 일본군을 마지막에 귀환하도록 한 것은 조선에서 일본의 행정망과 물리력을 유지함으로써 한반도 거주 일본인들의 ‘안전’과 심리적 ‘안정’ 도모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군정은 일본의 계획과 달리 일본군 귀환을 가장 먼저 추진했다. 미군정의 일본인 귀환 순서는 ①현역 일본군, ②휴가 중이거나 제대한 군인과 그 가족, ③옛 일본경찰 등 바람직하지 않은 자, ④신관(神官), ⑤일본인 광산노동자, ⑥일반 민간인 중 원호대상자, ⑦일반 민간인, ⑧고위 공직자와 회사간부, ⑨교통 및 통신요원 순이라 발표했다.⁴⁸⁾

미군이 가장 주의를 기울인 집단은 일본군이었다. 군의 수송은

46) 森田芳夫·長田かな子編, 『朝鮮終戦の記録 : 資料篇 2』, 巖南堂書店, 1979, 338~339쪽.

47) 허호준, 「태평양전쟁과 제주도-미군의 제주도 주둔 일본군 무장해제 과정을 중심으로」, 『사회와역사』 72, 2006 참고.

48) 森田芳夫·長田かな子編, 『朝鮮終戦の記録 : 資料篇 2』, 巖南堂書店, 1979, 20쪽.

조선군사령관 고즈키 요시오(上月良夫)가 직접 미 제24군단의 지휘를 받아 실시했다. 일본이 일본군을 가장 마지막에 수송하려고 했던 반면, 미군은 일본군을 가장 먼저 수송하겠다고 결정했다. 이것은 연합국이 합의한 포츠담선언 제8조 영토조항, 제9조 일본군의 무장해제와 본토 귀환과 관련한 것이었다.

일본군 귀환은 철도와 선박을 이용한 수송 체계로 준비되었다. 귀환항은 부산항으로 지정하고, 여수항과 목포항의 사용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일본 귀환항은 하루 2,000~3,000명을 수송할 수 있는 하카다(博多)를 희망했다. 수송 개시는 미군이 상륙한 직후로 설정했다. 수송순서는 가장 먼저 진해와 부산지구의 해군, 두 번째는 부산 부근의 육군, 세 번째는 대전 이북의 육군, 마지막으로 기타 육군이었다. 이보다 우선하는 것은 항공부대와 부상병이었다. 실행에 이르러서는 수송 순서도 변경되고, 귀환항으로 부산-인천-진해-제주가 지정되었다. 수송선으로 기선, 해군 선박, 미군 상륙용주정을 동원해서 전개했다.⁴⁹⁾

일본군은 부산, 인천, 제주, 진해에서 수송선을 타고 일본으로 귀환했다. 진해의 일본 해군은 별도의 수송체계를 갖추었다. 미군의 보고서를 근거로 정리한 문서에 따르면 조선 남부의 일본군은 1945년 9월 8일자로 귀환을 시작하여 두 달여 만에 상당수의 일본군이 귀환하였고, 1946년 4월 28일 509명이 마지막으로 귀환했다.⁵⁰⁾

49) 김윤미, 「해방 직후 일본군의 귀환 수송과 부산항」, 『역사와 실학』 74, 2021, 68~69쪽.

50) 「Chapter X, Educating Japanese Troops(Maps, Appendices)」Historical Manuscript Files, 1943-1948 [Entry NM3 488]

5. 결론

연합군의 아시아태평양전쟁 전후처리는 일본군을 무장해제하여 무력화시키는 것을 최우선 임무로 했다. 한반도의 일본군 무장해제를 위해 미국과 소련은 작전경계선을 38선으로 설정하고 각각 남과 북을 점령했다. 우리가 미군정기라고 부르는 3년은 미군이 점령을 시작하여 정부 수립 이후에는 민간에 권한을 이관하고 철수하는 과정이었다. 유럽에서 실시했던 군정을 적용한다면 미군과 소련군이 공동으로 정부를 수립하고 철수하는 연합군정의 사례이다. 이러한 공동 정부 수립을 위해서는 군사회의를 추진해야 했다. 1946년 1월에 서울에서 열렸던 미소공동위원회가 바로 군사회의였던 것이다. 그러나 미소공동위원회는 군사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시작되었지만, 점차 정치외교적 힘이 개입하면서 대립으로 치닫고 결국 무산되었다.

1945년에 대한 여러 난제들이 있다. 이 중 군사적 관점에서 두 가지만 본문의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려고 한다. 첫 번째는 한반도를 나눈 38선에 관한 것이다. 왜 한반도를 38선으로 분할했는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과 의문을 제기한다. 38선이 점령선에서 분단선으로, 6·25전쟁 이후 휴전선이 되어 현재까지 남과 북을 나누는 선이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미국이 처음 38선을 정했을 때는 군사력이 미치는 범위 정도 이상의 의미를 두지 않았다. 미국 3부회의에 39선을 그었더니 대련이 포함되므로 소련의 점령범위인 만주를 포함할 수 없어 38선으로 다시 그었다는 연구가 있다. 그렇다면 미국이 38선을 지정한 것은 미국의 영향력을

표시한 임의의 가상선이었다. 분할선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한반도라는 공간에 미군과 소련이 점령한 후 연합군정 체제에서 정부를 수립하고 철수했다면 그럴 수 있었다. 그러나 1946년 정치력이 개입되면서 분단선으로 고정되어 버렸다.

두 번째는 미국은 왜 일본에 시행했던 군정을 철회했는가이다. 즉 군정이 아니라 민정을 시행하였는가. 유럽과 태평양 지역의 전후처리에 따른 군정을 보면 한반도가 아니라 일본이 분할 점령과 연합군정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미군이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일본의 외교적 노력이 있었다는 등의 여러 추측성 주장이 나오지만, 명확한 답이 되지는 못한다. 군사적 측면에서 보자면, 소련은 38선 이북뿐 아니라 일본 홋카이도 점령까지 기도했다. 그렇게 되면 전범국인 일본은 독일처럼 분할되어 미국과 소련의 연합군정이 들어서는 했다. 그러나 미국은 일본을 온전히 미국만의 점령지로 하기를 원했고 그들의 군사력만으로 일본 점령이 가능하다면 굳이 연합군정을 선택하지 않는다. 때문에 소련이 일본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을 사전에 차단했던 것이다.

이 글에서 일본의 항복과 무장해제 등의 전후처리, 항복문서 조인식과 통치권 이관, 그리고 군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 과정을 통해 앞으로 해야 할 과제를 몇 가지 찾을 수 있었다. 첫째는 미군이 실시한 군정이란 무엇인가를 군사적인 측면에서 면면히 밝혀보는 것이다. 이것은 미군정기를 어떻게 규정하고 평가할지를 논의하는데 하나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1945년의 군정은 미국과 소련의 연합군정이었다. 다른 나라의 유사 사례와 비교하고, 특히 연합군정을 시행했던 독일과 이탈리아의 사례 비교 분석도 필요하다.

두 번째는 무장해제의 범위와 의미에 대한 정리다. 무장해제는 군을 해체하고 무력화시키는 과정이다. 일본군의 군사적 자산을

제거하고, 미군이 모두 이관받았다. 군수물자로 비축해둔 많은 군수물자는 어떻게 처리했을까? 당시 배급제였던 한반도의 상황에서 배급이 중단되면 어떻게 식량을 해결할 수 있었을까? 등의 의문이 잇따른다. 또한 미군은 상당히 많은 토지를 이용하거나 전용했다. 이와 관련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 절차와 현황을 검토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세 번째는 전쟁범죄 처리에 관한 것이다. 한국에 존재했던 포로 수용소의 소장 등 일부 관계자들이 국제법상 포로에 관한 사항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 외 전범처리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도 필요하다.

〈참고문헌〉

- 국사편찬위원회, 『미군정기군정단, 군정중대문서』 1~5, 2000
국사편찬위원회, 『주한미군사』 1~4, 2014
김윤미, 「해방 직후 일본군의 귀환 수송과 부산항」, 『역사와 실학』 74, 2021
김윤미, 「1945년 해방공간에서 교차하는 미군과 일본군의 이동」, 『지역과 역사』 48, 2021
남정옥, 『한미 군사 관계사 1871~200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藤原彰 著, 『日本軍事史』, 시사일본어사, 2013
박동찬, 『6·25전쟁기 민사작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4
森田芳夫, 『朝鮮終戦の記録』, 巖南堂書店, 1967
서준석, 김재웅, 이정은, 『서울근현대사자료집 1. 서울지역 관할 미군정 문서』, 서울역사편찬원, 2017
송정현, 『미군정의 지방 통치 연구(1945-46)』, 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송정현, 「1945년 미군의 남한 진주과정과 ‘베이커-포티(Baker Forty)’ 작전지역의 설정배경」, 『전북사학』 63, 2021
야마다 아키라 지음, 윤현명 옮김, 『일본, 군비확장』, 어문학사, 2014
유지아, 「전후 재조선일본군의 무장해제 과정에서 형성된 한미일관계」, 『한일관계사연구』28, 2007
육군본부, 『세계군정사 : 2차대전을 중심으로』, 육군본부 군사연구실, 1983
이연식, 『해방 후 한반도 거주 일본인 귀환에 관한 연구 - 점령군, 조선인, 일본인 3자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이완범, 『한반도 분할의 역사』,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3
전갑생, 이선아, 『서울근현대사자료집 8. 서울지역 미군기지 배치 관련 문서』, 서울역사편찬원, 2024
정형아, 『동아시아 전후처리와 중·소갈등(1941~195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9
조건, 「해방 직후 일본군의 한반도 점령 실태와 귀환」, 『한국학논총』 47, 2017
조건, 「일제 강점 말기 조선주둔일본군의 조선인 포로감시원 동원과 연합군 포로수용소 운영」, 『한국근현대사연구』 67, 2013

- 최영호, 「일본의 항복과 한반도 분단」, 『역사문화연구』 62, 2017
- 푸른역사, 『한국현대사 1: 해방과 분단, 그리고 전쟁』, 푸른역사, 2018
- 허호준, 「태평양전쟁과 제주도-미군의 제주도 주둔 일본군 무장해제 과정을 중심으로」, 『사회와역사』 72, 2006
- 황선익, 「중국 관내지역 일본군 무장해제와 韓人 병사」, 『한국학논총』 44, 2015

〈Abstract〉

Disarmament of Japanese Forces and Military Government on the Korean Peninsula in 1945

Kim, Yun-Mi

Following the Asia–Pacific War, postwar settlement began. The goal was to disarm and neutralize the Japanese military to prevent it from waging war again. To accomplish this, the Allied Forces initiated military occupation and implemented military operations to establish military governments.

In the case of the Korean Peninsula, the 38th parallel was drawn as the operational boundary line, with U.S. and Soviet forces occupying the north and south respectively. The divided Korean Peninsula, not recognized as an independent nation, came under the direct rule of the military government established by the U.S. forces. This article revisits the process and outcomes of why this occurred. It examines the concepts of postwar settlement and military government, the characteristics of postwar settlement in Asia, a military review of the situation in Korea in August 1945, and the implementation and results of the U.S. military government, reflecting on the meaning of postwar settlement and military government.

Keywords : World War II, Pacific War, post-war treatment, Cold War, U.S. military government, war criminal treatment, Soviet Union (Russia)